

'양향자 지역구' 총선 격전지 부상...현역만 3명

국힘 반도체특위위원장 수락... 광주서구를 정가 술렁

출마예정자들 양의원 지역구 잠식 물밑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공격 행보에 따라 지역정가가 떠들썩아술렁이고 있다.

양 의원은 "특정 정당의 소속됨이나 입당은 없다"고 확고히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어 총선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지역정가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양 의원의 톨러코스터 행보에 광주서구들은 22대 총선의 최

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개원 즉시 특위 설치 약속을 받았고 국민의힘의 약속과 의지를 믿고 위원장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도약이나 쇠퇴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현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맡겨야 할만큼 중차대하다. 정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과격적인 행보에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가 예상되는 광주 서구를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좌진의 성비 위 문제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올해 복당 신청을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복당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에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을 수락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양 의원이 무소속에 이어, 국민의힘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2024년 총선도 조기 과열되는 양상이다. 당장 양 의원의 지역구에는 현재

양 의원을 포함해 현역의원 3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사실상 총선 없는 전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양 의원 지역구를 잠식하기 위해 출마예정자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의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양 의원 사무소가 있는 금호동 풍금사거리 바로 맞은편에 지난해말부터 사무소를 차리고 지역구 의원을 방불케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근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도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사무소가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의원 출신인 강 의원은 총선 도전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 민선 7기 기업 1002개 유치 '역대 최대'

투자협약 27조 8000억...민선 6기 대비 63%↑

에너지 분야 최다...고용창출 3만1000명 기대

전남도는 민선7기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목표치를 초과한 10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규모는 27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도 불구하고 민선6기(17조 800억 원)보다 63%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1000여 명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 착공 등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557개로, 56%의 실행율을 보였다.

업종별로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는 (주)한양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196개(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가공 분야 156개, 지식정보서비스 분야 155개, 철강·기

계 107개, 전기·전자 57개, 관광 34개, 조선 기자재 20개, 기타 198개 순이다.

임지별로는 100% 분량을 눈앞에 둔 목포대양산단 등 일반산단에 432개 기업(43%)이 입주했다.

이어 혁신산단·도시에 281개 기업, 개별입지에 160개, 농공단지에 65개, 국가산단에 57개, 광양항 배후단지에 7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에너지밸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는 나주 등 중부권에 400개(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수 등 동부권에 193개(19%), 목포 등 서부권에 191개(19%), 장흥 등 남부권에 127개, 담양 등 북부권에 91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배 기자

광주 에너지파크 민간 운영
기관 공모...내달 11일까지

광주시가 에너지파크를 운영할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7월11일까지 공모한다.

에너지파크는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지상 1층 993㎡ 규모의 에너지 전시관과 에너지 다리, 에너지 분수 등 외부 전시물 9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전시·체험·교육공간이다.

시는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 업무협약을 한 뒤 지난해 9월28일 정식 개관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단체는 8월3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파크 운영과 시설 유지 관리, 시민 에너지 전환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시책 개발 등을 맡게 된다.



2022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 참석

이홍섭 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 참석해 정부포상과 공로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여순특별법 제정 1년...전남도 진상규명·명예회복 '속도'

캠페인 활성화 등 피해신고·접수 지원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74년 한을 풀도록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신고접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개월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다중집합장소 광고, 현수막 게시,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사건 발생 74년이 지나 대부분 고령이 된 유족의 피해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등을 함께 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를 돕고 있다.

시군 책임 공무원 지정, 사실조사요원 시군 배치, 조사 전문 임기제 채용 등 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해 7월에는 첫 희생자 유족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일상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시간번호:2022-단666 상속한정승인
사망자:조태진(1952년06월10일생)
최후주소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20, 203동 606호(쌍촌동, 우미아트빌)
위 망 조태진의 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 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6월 29일

공 고 인 : 나경애
주소 :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20, 203동 606호(쌍촌동, 우미아트빌)
한정승인수리일 : 2022. 6. 23.
공고기간:2022. 6. 29~2022. 8. 28.

광주 인공지능 현장 시민-학생들 '복적'

광주·전남 대학생 20여명 AI 창업캠프 방문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AI 기업 창업요람인 광주 AI 창업캠프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동구 AI 창업캠프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20여 명이 방문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AI 종합지원센

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형수 센터장은 "AI 기업이나 비창업자 누구나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추적해 민원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기업이 광주에서 크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 광주가 AI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형안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일이 행복한 광주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